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9, pp.33-80  
<https://doi.org/10.29212/mh.2018..109.2>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러일전쟁 이전 대한제국 원수부의 군무정책 강화와 군사운영의 성격\*

문준호\*\*

1. 머리말
2.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원수부 개편과 군무정책의 강화  
가. 러·일의 갈등 고조와 의화단 확산에 따른 위기의식 대두  
나. 「원수부관제」 개정 및 군비확충을 통한 군무의 격상
3. 대내외 위기에 대응한 원수부의 군사운영과 지향 목표  
가. 국경지역 병력 증강과 방어태세의 강화  
나. 지방 진무 및 내부 안정을 통한 외세의 개입 차단
4. 맺음말

\* 본 연구는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임.

\*\* 육군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조교수

## 1. 머리말

1899년 6월 22일, 대한제국 정부는 「元帥府規則」을 반포하였다. 이는 당시 대두하였던 군제개편 논의 수렴과 대내외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구상된 ‘強兵政策’의 일환이었다.<sup>1)</sup> 주지하다시피 외압의 고조와 내부 정세의 혼란은 조선의 사회구조 내에서 군사 분야의 중요성을 증대시켰고, 이는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따라서 정국운영의 실질적 중심으로 거듭나고자 했던 고종이 원수부를 창설할 당시, 실재했던 대내외적 위기는 군사기능이 집약된 기구 창설에 당위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고종은 외세로부터의 대외적 자주성 확보는 물론 정권 장악 및 내부 안정에 진력할 기반을 마련하였다.

원수부는 조직의 책임자가 대원수로 설정된 특별 기구이자, 국방에 관한 명령을 관장하고 군부와 중앙 및 지방군을 지휘·감독하는 군사기관이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 군부가 관장하던 제반 군사업무는 고종의 의도가 반영된 원수부의 기획으로 실행되었다. 특히 국제정세의 급변과 내부 불안정에 따라 군무의 중요성이 격상되자, 원수부의 기능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권력 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었으며, 군사운영을 총괄했던 원수부는 광무연간 대한제국의 핵심기구로 자리매김하였다. 러·일 개전 이후 일본이 군제개정을 명분으로 기능을 상실시켰던 정부조직이 원수부였다는 점 역시 위 사실을 방증한다.

지금까지 대한제국기 군사제도에 관한 연구는 근대적 군제의

1) 軍事は 근대사회의 핵심 분야로 政治·經濟·文化 등과 접합하여 國家制度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富國強兵’ 그 자체는 근대국가가 지향한 목표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군사제도 및 운용에 대한 천착은 ‘근대’라는 역사적 시대상을 규명하기 위한 일 분야로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수용과 변화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피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sup>2)</sup> 원수부를 단일주제로 한 연구 역시 관제를 표면적으로 분석하여 설치 및 폐지를 제도적 차원에서 주목한 소고였다.<sup>3)</sup> 이들 연구는 연대기 사료 및 칙령으로 반포되거나 법령으로 명시된 사료를 활용했지만, 대내외적 요인과 군사적 대응을 연동하여 파악하지 않았으므로 제도사의 공백 속에 놓여있는 군사운영의 실질적 양상과 성격에 관한 해석을 유보하였다. 한편 군사정책의 추이와 역사적 성격을 황권 강화와 결부시켜 파악한 연구<sup>4)</sup>, 군사력 증강책의 발현을 대외정책의 범주에서 분석한 연구<sup>5)</sup>에서는 대한제국의 전반적인 군사기구를 전제군주제 지향을 위한 권력 확보 수단으로 평가하며 국방 기능을 부정하였다. 당대 추진된 군사력 증강을 강압적 권력의 축적으로 파악하며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였던 것이다.

해당시기 정치사 연구는 정권기반의 실질적 요소인 군사력을 다루는 기구라는 점에서 원수부 창설을 고종의 황권강화책의 일환으로 해석하였다.<sup>6)</sup> 당대 추진된 제반 정책의 성격이 근대적이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논쟁이 공전하는 가운데 원

2) 車俊會, 「韓末 軍制改編에 대하여 : 軍隊解散에 이르는 過程」, 『歷史學報』 22, 1964 ; 車文燮, 「舊韓末 軍事制度의 變遷」, 『軍史』 5, 1982 ; 金世恩, 「開港 이후 軍事制度의 改編過程」, 『軍史』 22, 1991 ;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2000 ; 심현용, 『한말 군 근대화』,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編, 『한국군사사』 9, 경인문화사 2012.

3) 鄭夏明, 「韓末 元帥府 小考」, 『육사논문집』 13, 1975.

4) 조재곤 「대한제국기 군사정책과 군사기구의 운영」, 『역사와 현실』 19, 1996.

5) 현광호, 『대한제국의 대외정책』, 신서원, 2002.

6)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徐珍教, 「대한제국기 정치지배세력과 정국운영-군비강화책의 추진과 권력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6, 2003 ; 張暎淑, 「고종의 軍統帥權 강화시도와 무산과정 연구 - 대한제국의 멸망원인과 관련하여」, 『軍史』 66, 2008 ; 도면희, 「황제권 중심 국민국가체제의 수립과 좌절(1895~1904)」, 『역사와 현실』 50, 2010.

수부의 창설은 대체로 친위기구의 운영을 통한 고종의 공권력 장악으로 이해된 것이었다.<sup>7)</sup> 이외에도 군사예산의 운영양상과 성격을 구명하는 연구에서도 원수부는 언급되었다.<sup>8)</sup> 이들 연구는 정부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군비의 확대 동인과 실제 지출양상 및 지급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전술한 정치·재정분야의 연구들은 시기별로 변화된 외부세력의 영향력과 국내의 사회문제 확산에 대응한 원수부의 역할 및 기능을 군사적 관점에서 조명하지 못하였다.

요컨대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통해 원수부를 비롯한 대한제국의 군사기구는 군 본연의 직무인 국방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집단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수부가 추진했던 군사정책과 병력운용의 의미는 동아시아라는 확장된 범주의 국제정세와 구체적인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이해해야 한다.<sup>9)</sup> 국방은 위협세력의 행위와 대응관계에 있고, 위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인 외압과 내부소요는 시기별로 복잡한 층위를 보였으며, 정부의 상황판단 및 위협정도의 인식에도 우선순위가 있었다. 따라서 병력의 전개양상을 토대로 군사정책의 추진과 그 지향 목표를 치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군사운영의 양상이

7) ‘광무개혁’ 연구반, 「‘광무개혁’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 현실』8, 1992 ; 이태진·김재호 외, 『고종황제 역사청문회』, 푸른역사, 2005 ; 한영우 외,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 푸른역사, 2006.

8) 이윤상, 「1894~1910년 재정 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 양상현, 「대한제국의 군제 개편과 군사 예산 운영」, 『역사와 경계』61, 2006 ; 김기성, 「대한제국기 진위대 증설의 재정적 영향」, 『역사와 현실』90, 2013.

9) 최덕수는 19세기 한국근대사 연구에 있어 외압의 주체 및 영향력의 층위가 시기별로 변동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연구시기의 국내정황 및 국제정세를 포괄하여 총체적으로 분석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최덕수, 『개항과 조일관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 \_\_\_\_\_, 『대한제국과 국제환경 : 상호인식의 충돌과 접합』, 선인, 2005.

뚜렷하게 드러나는 1899~1901년까지를 중심으로 대내외적 위협의 정도와 대응의 우선순위 판단에 따라 이행되었던 당시 대한제국의 군사정책의 궁극적 의도와 지향 목표는 적어도 국방에 있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2장에서는 러·일의 군비경쟁과 의화단사건의 발발로 가중된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혼란과 그 대응책으로 마련된 대한제국의 군무정책 강화를 「元帥府官制」개정과 군비확충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3장에서는 국경지역에서의 방어태세 강화와 내부 안정이 국외세력의 침략적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있었음을 논증하여, 원수부를 통한 군사운영의 지향이 국가 안전보장에 있었다는 것을 규명한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활용한 사료는 다음과 같다. 우선 황제의 재가를 받은 奏本의 副本을 모아놓은 『元帥府奏本副』(奎17784), 원수부와 외부의 조회와 조복을 엮은 『元帥府來去案』(奎17809), 원수부에서 의정부로 보낸 군 관계 공문을 철해 놓은 『元帥府來文』(奎17783) 등 奎章閣 소장 자료를 참고하였다. 해당 사료들은 당대 원수부를 중심으로 추진된 군사정책과 실질적인 병력운영을 살피는데 유효하였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러·일의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駐韓日本公使館記錄』, 『러시아자료 번역집』을 활용했으며, 『프랑스외무부문서』를 통해 제 3국의 당대 정황인식까지 파악하였다. 이러한 사료들은 다원적 주체의 입장에 따라 기록된 것이므로 상호참작하여 객관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한편 언론보도의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皇城新聞』, 『독립신문』, 『데국신문』 등 국내신문과 『東京朝日新聞』, 『東京日日新聞』, 『鎭西日報』, 『The New York Times』 등 다방면의 해외신문 기사까지 폭넓게 참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梅泉野錄』, 『뫼텔주교일기』, 『Undiplomatic Memories』 등

내·외국인 기록을 통해 당대 정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전체 사료의 날짜표기는 원문을 따르되, 음력은 양력으로 일괄 전환하여 표기하였다.

## 2.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원수부 개편과 군무정책의 강화

### 가. 러·일의 갈등 고조와 의화단 확산에 따른 위기의식 대두

창설배경에 담긴 복합적 동인으로 원수부는 고종 직속의 ‘특별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보다 군사 분야를 담당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기구였다. 따라서 현실화된 대외적 위협에 대한 대응은 최고군사기관으로 신설된 원수부가 담당해야 할 직무였다.

1899년 7월부터 러시아와 일본이 충돌한다는 풍설이 대내외에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군과 일본 순사가 부산의 일본인 거류지 京阪亭에서 마찰을 일으킨 것이 발단이었다.<sup>10)</sup> 이후 일본 함대 9척이 인천에 집합하고 육전대가 남산에서 군사훈련을 하자 러시아 공사관의 스트렐비츠키(И.И.Стрельбицкий)는 블라디보

10) 부산 소재 서양요리점 경관정에서 러시아 코레예츠(Koryetz)호 승선 해군사관이 술에 취해 해당식당 기생과 고용인을 폭행하여 일본 순사 2명이 러시아 사관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으로 이는 양국의 외교 분쟁으로 확대되어 양국은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일본순사에 대한 처벌과 해당 요리점에 대한 경고로 일단락되었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3, 1899年 7月 13日, 在釜山 領事館事務代理 領事官補 中村巍 → 外務大臣 子爵 青木周藏; 朴鐘淳編著, 2002, 『러시아 國立文書保管所 所藏 韓國 關聯 文書 要約集』, 한국국제교류재단, 225쪽.

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군함 12척을 인천에 보내 견제할 것이라 언급하는 등<sup>11)</sup> 양국은 첨예한 외교적 대립을 이어갔다. 이는 무력충돌의 촉발원인이자 보다 자국의 이익 보호 및 실현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갈등을 고조시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899년 10월에는 부산에 상륙한 러시아 순양함 가이다막(Гайдамак) 선원 12명에게 부산에 거류중인 일본인 200명이 돌을 던져 7인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sup>12)</sup> 이로 인해 러시아 해군성에서도 일본군의 공격 재발을 막기 위해 동일한 수의 군대를 대한제국에 주둔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람즈도르프(В.Н.Ламздорф)에게 상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외교적 마찰은 곧 양측 갈등의 근원이었던 만주에서의 러시아 우위 인정에 관한 문제로 확산되었다. 이것은 또한 양국의 한반도 인식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러시아는 만주확보를 위해 대한제국을 일본에게 ‘양보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일본은 이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달성한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sup>13)</sup> 이후 대한제국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상호를 견제하던 국면이 전환되어 만주가 분쟁지역으로 거듭나자 러시아 내부에서도 분쟁의 근원지를 대한제국으로 이동시켜 다시금 한반도를 쟁점지역으로 선정하고 만주에서의 우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 되었다.<sup>14)</sup>

이후 러시아는 豆滿江·鴨綠江·旅順으로 이어진 전선의 장악

11) 『駐韓日本公使館記録』 13, 機密第71號, 1899年 7月 26日, 林公使 → 青木外務大臣.

12) 朴鐘孝 編著, 위의 책, 2002, 225쪽.

13) 러시아는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 것에 대해, ‘관념적’이라고 하더라도 러시아가 일본이 대한제국에서 지배적 이해관계를 가지도록 인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양보’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박재만 譯, 『러시아문서 번역집』 6, 선인, 2011, 167~168쪽 참고(ГАРФ, ф.543, оп.1, д.185, лл.1-107об).

14) 『러시아문서 번역집』 6, 162쪽 참고(ГАРФ, ф.543, оп.1, д.185, лл.1-107об).

을 계획하였고,<sup>15)</sup> 1899년 전쟁·해군·교통성에 정부 총 지출의 약 48.3%를 투자하였다.<sup>16)</sup> 이러한 러시아의 외교적 조치에 대해 당시 주한 프랑스공사 플랑시(Plancy)는 러시아가 대한제국을 전략적 중요지역으로 선정하여 자신들의 세력권 내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본국에 보고하기도 하였다.<sup>17)</sup>

일본 또한 1899년 세출총액의 약 44.9%를 군사비에 투자하며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였다.<sup>18)</sup> 특히 해군력 증강에 집중하여 1896년부터 차후 10년간 군함 94척, 기타잡선 584척을 건조시킬 계획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에 관한 총 경비는 약 213,100,000 円으로 1894년 청일전쟁 전체 전쟁비용에 필적하는 거액이었다.<sup>19)</sup> 이처럼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 양상이 해군력증강으로

15) 해당지역 확보의 이점을 러시아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①한반도 북부 산악 및 해안의 자연적 장애물과 전초기지를 설치를 통해 최단 거리의 국경을 확보할 수 있다. ②전략적 전선의 위치를 후방의 연락보급로와 수직을 이루게 함으로써 원활한 상황전파 및 효율적 보급체계를 구비할 수 있다. 『러시아문서 번역집』 6, 50~51쪽 참고(ГАРФ, ф.543, оп.к.의 1, д.185, лл.1-107об).

16) 당시 러시아 정부의 총 지출은 1,464,000,000루블이었다. 그런데, 육군성·해군성·교통성은 각각 336,000,000루블(22.9%), 84,000,000루블(5.7%), 288,000,000루블(19.7%)로 3개 기관의 총 지출이 정부 총 지출 가운데 48.3%를 차지하고 있었다. Dietrich Geyer, trans. Bruce Little, *Russian Imperialism-The Interaction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y 1860-1914*(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87, p.139.

17) 국사편찬위원회 編, 2010, 『프랑스외무부문서』 9, 1899年 10月 14日, 일본 주재 프랑스공사 J. 아르망 → 외무부 장관 텔카세, 31쪽.

18) 일본의 군사비는 1896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세출총액의 40~50%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1899년부터 1900년까지 1년 사이 총 군사비는 114,308,000 円에서 133,174,000 円으로 확대되어 18,866,000 円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山田朗, 『軍備擴張の近代史-日本軍の膨脹と崩壊』, 吉川弘文館, 1997, 10~11頁.) 이는 실질적인 군사충돌이 있었던 청일전쟁·러일전쟁 기간을 제외하였을 때, 가장 큰 폭으로 군비가 확대된 시기였다. 이를 통해 러시아와 일본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 일본은 1896년을 기점으로 1905년에 완공 계획이었던 전함들을 러시아와의 정



나타나자 국내의 언론 또한 양국의 군비경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皇城新聞』과 『독립신문』에는 양국의 군함 확보에 관한 기사가 실렸고,<sup>20)</sup> 러시아가 동양함대를 압록강 일대에 취집하고 여순에 있는 군대를 한국으로 파송한다는 것과 이에 대항해 일본의 육군도 한국으로 상륙한다는 것이 보도되기도 하였다.<sup>21)</sup> 한편 유럽에서도 러·일의 충돌을 예상할 만큼 양국의 군사적 행보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독일신문 *Kölnische Zeitung*<sup>22)</sup>은 양국의 개전에 대해 긴박한 논조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조만간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단절은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다만 봄이 올 때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본이 유럽에 주둔한 다량의 선박이 배송되기를 기다리기 때문이며, 그쯤에 모두 완료될 것

세가 긴박해짐에 따라 계획보다 3년 앞당긴 1902년에 건조하였다.(藤原彰 著, 서영식 譯, 『日本軍事史』上, 제이앤씨, 2013, 145~146쪽) 특히 전투·해상 화력 지원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비교적 소규모이면서도 독자적 작전이 가능한 구축함을 계획보다 다수 확보한 것은 러시아와의 충돌에 즉각 대비하기 위한 성격의 조치로 판단된다.

[표 1] 일본의 군함 제작 계획과 실제 건조된 군함 수(1902)

구분	장갑전함	수뢰포함	수뢰모함	순양함	수뢰정	구축함	총계
계획	4	3	1	11	63	12	94
실제	4	1(-2)	0(-1)	12(+1)	66(+3)	23(+11)	106(+12)

20) 『皇城新聞』 1899年 11月 22日, 外報「日俄軍備」; 11月 28日, 外報「俄國海軍豫算」; 『독립신문』 1899年 12月 2日, 잡보「일이군비」.

21) “俄國은 東洋艦隊本部中幾許兵艦을 鴨綠江의 海口에 聚集하기로 準備하고 且旅順口의 駐屯俄兵을 韓國으로 派送한다”고 又東京發電에 日本의 廣島縣鎮臺의 陸軍은 一兩日間派出할터인 其所向處 莫知하나 韓國으로 向할듯하다”고 하였다. 『皇城新聞』 1900年 2月 3日, 雜報「日俄派兵」.

22) 독일 라인란트 지방 신문인 *Kölnische Zeitung*은 1895년부터 세계 각국의 해군력 증진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독일의 국가방위 강화 및 상업적 이익을 위해 대규모 건함정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김태산, 「독일 해군연맹(Deutscher Flottenverein)의 성격 변천 -1898~1908년 지도부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양사연구』 35, 2006, 100쪽 참고.

이다. 현재 선박은 거의 완성된 상태이다.<sup>23)</sup>

이처럼 양국의 충돌 가능성은 대내외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는 태평양 분함대 사령관 길테브란트(Гильтебрандт) 제독에게 훈령을 내렸는데, 그 내용은 블라디보스톡과 뤼순을 주요거점으로 장악하여 기동훈련 및 함포사격 등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 장교들을 이용하여 첩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외국 주요 신문을 번역하여 러시아 본국으로 송부할 것, 연료 보존 및 절약과 함선 결합 시정을 통해 전투물자를 축적할 것, 전자 및 수신호체계를 숙지하고 비밀서한 중 특별히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장교를 통해 보고할 것 등이었다.<sup>24)</sup> 전반적으로 유사시를 대비하여 전투임무 수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다하라는 내용이었다. 한편 일본 역시 군함을 이용하여 평안도 연해를 측량하였으며, 주한 육군 수비병은 야외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sup>25)</sup>

이처럼 양국의 충돌설 및 긴장관계 형성으로 대한제국의 대외 위기의식은 고조되었다. 우선 고종은 평양 진위대를 수도의 규례와 같이 편제할 것을 원수부에 지시하였다.<sup>26)</sup> 이로 인해 1899년 1월 15일 勅令 第2號 「鎮衛隊編制를 改正하는 件」 반포 이

23) 『프랑스외무부문서』 9, 1899年 11月 11日, 베를린 주재 프랑스대사 드 노에이-외무부 장관 텔카세, 40~41쪽.

24) 국사편찬위원회 編,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2, 2009, РГАВМФ, ф.417, оп.1, д.2011, лл.15~20.

25) 1899년 10월 13일, 일본의 해군대신이었던 아마모토 곤베(山本權兵衛)는 ‘현 시점에서 러시아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니, 러시아 군함과의 직접적 접근은 피하되 원거리에서 거동을 신중히 감시하라.’는 훈령을 내리는 등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조심스런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1900년 초부터 일본은 한반도 내에서 연해측량, 야외훈련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皇城新聞』 1900年 2月 14日, 雜報 「日艦來港」, 「日隊野演」.

26) 『元帥府奏本副』1 光武 3年 11月 3日.

후 404명 편제로 구성되었던 평양 진위대는 기존대비 2배 이상 증원되어 대대본부 예하 5개 중대 편성으로 확대되었고 총 인원은 1,004명이 되었다.

고종은 조령을 내리며, “外侵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평양은 관서의 요충지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군사적 조치는 러시아와 일본이 압록강일대 및 진남포 등 관서지방에서 충돌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러·일 양국의 군비증강 및 충돌설에 대한 대한제국의 대응은 상황발생 가능지역에서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에 군대를 증설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sup>27)</sup>

한편 義和團事件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1898년부터 淸匪의 침략은 국경지역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부로부터 예산 및 무기를 받아 자구책을 마련하였다.<sup>2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비의 침략이 지속되자 평안북도 관찰사 朴鳳彬과 함경남도 관찰사 趙民熙는 청비 출몰지역에 포군 설치를 건의하였다.<sup>29)</sup> 이는 원수부 군무국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이로써 국경지방에서의 청비에 대한 방어는 해당지역의 군민과 포수를 중심으로 실현되었다. 당시까지 청비는 국가전복의 위

27) 1899년 1월 15일, 조령 제2호로 반포된 「鎮衛隊編制를 改正하는 件」의 제4조에는 ‘第4條 各鎮衛·地方大隊 原位置 外에 緊要한 區域이 有하거든 自該隊로 量宜하여 隨時 分置하고 出駐도 할 事.’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평양부에 증강한 진위대의 임무는 평양 방어라기보다는 요충지에 대한 군대증설을 통해 상황발생지역으로 신속히 병력을 투입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28) 정부에서는 1898년 9월 27일, 三水郡淸匪作擾時防守費 명목으로 663元 2錢의 예산을 해 군에 지급하였다. 한편 경원군 주민들은 「施惠字民」 11개조에서 청비의 침략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확산되니, 조총을 지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皇城新聞』 1898年 12月 5日, 雜報 「施惠字民」.

29) 박봉빈과 조민희는 청비의 침략에 의해 인명·재산 피해가 막심하니 1896년 6월 11일 군부령 제 2호로 내려진 「유사한 지방 각군에 포수를 설치하는 세칙」에 따라 포군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고, 이는 원수부 군무국장 조동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元帥府來文』 1, 光武 3年 10月 10日.

협주체로는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군대투입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1900년 초부터 의화단 교도의 팽창이 가속화되어 그 활동범위는 直隸省 전역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열강은 의화단 확산을 제지하기 위해 청국정부에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sup>30)</sup> 대한제국 역시 청국내부 동향에 관심을 가졌는데, 1900년 2월 7일 하야시(林權助) 공사 접견시 고종은 의화단이 ‘東洋禍亂의 根源’이 될 수 있다고 염려하며 관련정보를 요청하기도 하였다.<sup>31)</sup> 이후 청국정부의 의화단에 대한 통제력을 신뢰하지 못했던 청국 주재 공사들은 1900년 3월 11일, 본국에 군대를 요청하였다.<sup>32)</sup> 이 시점부터 서구 열강의 군대투입은 기정사실화되었고, 인접국의 전쟁 상황에 대한 대한제국의 대응은 군무의 격상으로 나타났다.

#### 나. 「원수부관제」 개정 및 군비확충을 통한 군무의 격상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러·일의 군비경쟁과 의화단 사건의 확산 등 대외적 위기에 대해 원수부는 점진적으로 군사적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이후 열강의 군 투입이 현실화되었고, 동아시아 정세의 급변으로 인해 대외적 위협은 심화되었다. 이러

30) *The New York Times*, April 15, 1900, ‘North China Terrorized’.

3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機密第3號, 1900年 2月 15日, 林 公使 → 外務大臣 子爵 青木周藏

32) Conger to Hay, March 9, 1900, telegram, March 10, 1900, Foreign Relations 1900, pp. 102-108. (William Reynolds Braisted, *The United States Navy In The Pacific 1897-1909*(Annapolis, Md. : Naval Institute Press), 2008, p.80.에서 재인용); 車瓊愛, 「韓國人の 義和團運動 認識 및 이를 통해서 본 世界認識」, 『東洋史學研究』 84, 2003, 59쪽.

한 상황적 맥락 속에서 대한제국은 1900년 3월 20일 「원수부관제」를 개정하였고, 이는 軍務 중심의 국정운영을 의미하는 조치였다.<sup>33)</sup> 이로써 원수부 4개국 局長의 호칭은 總長으로 승격되었고, 그 권한도 확대되었다. 고종은 관제개정 이후 즉각 관련 인사를 선별하였다.<sup>34)</sup>

[표 2] 원수부 초대 총장과 군사관련 주요 약력<sup>35)</sup>

구 분	군사관련 관직 및 약력	비 고
軍務局總長 李鍾健	1885년, 우포도대장 및 친군전영 감독 1895년, 총어사 및 연무공원관리사무 1896년, 육군부장 임명 및 군부대신	법규교정소 소속으로 「대한국국제」 제정 참여.
檢査局總長 趙東潤	1897년, 참령 임용 및 친위 3대대장 1898년, 육군참장 임명 및 군부협판 1899년, 육군부장 임명 및 원수부 군무국장	초대 군무국장 역임.
會計局總長 閔泳煥	1884년, 개성유수 · 해방 총관 / 1888년, 병조판서 1896년, 육군부장, 군부대신, 러시아 황제대관식 特命全權公使 1897년, 군부대신, 영국 여왕 즉위 60주년 의식 大使	「海天秋帆」, 「使歐續草」 등 저서에서 서구의 군제 및 규모를 긍정적으로 평가.
記錄局總長 李學均	1888년, 미군사교관 다이 보좌 1895년, 참령 임용 및 수원대 대대장 1899년, 육군참장, 원수부 검사국장	1898년, 무관학교 군사교범 『步兵操典』을 번역 · 출간.

육군 부장 李鍾健 · 趙東潤 · 閔泳煥은 각각 군무국 · 검사국 · 회계국총장에, 참장 李學均은 기록국총장에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순수 무관출신 또는 군 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풍부한 고위 관료로 모두 육군계급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들은 황제의 친위 관료군 범주에 포함되는 인물들로 고종의 의도 구현

33) 『高宗實錄』 光武 4年 3月 20日 ; 『官報』 光武 4年 3月 22日.

34) 『承政院日記』, 光武 4年 3月 21日.

35) 국사편찬위원회 編, 『大韓帝國官員履歷書』, 탐구당, 1972.

에도 적합한 인물들이었다.<sup>36)</sup> 이외에 추가 및 변동된 사안은 제 3관에 명시된 내용이다.

[표 3] 「元帥府官制」 개정(1900. 3. 20) 이후 주요 변동사항

관제개정 이전	
第四條	元帥府各局長은 奉勅奉令하여 府部大臣에게 知照通牒과 京外各隊에 訓令함을 得함이다.
第五條	各局長이 奉勅奉令하여 各隊에 卽訓함을 得하나 隨後라도 此를 軍部大臣에게 知照함이다.
관제개정 이후	
第四條	各局總長은 帷幄에 軍機 贊籌함이다.
第五條	各局總長은 局務를 因하여 議政府에 提議함 事項이 有하거나 議案을 具하여 講議함을 得함이다.
第六條	各局總長은 局務에 處辦과 決定을 元帥殿下에 經한後에 大元帥陛下에 入奏하여 蒙裁施行함이다.
第七條	各局總長은 奉勅奉令하여 各部大臣에게 指令함을 得함이다.
第八條	各局總長은 主任事務로 府部大臣에게 知照하고 警務使 觀察使 以下口 訓令 指令함이다.

관제개정 이후에 명시된 4조는 원수부 각국총장들이 軍國機務의 핵심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帷幄은 군령사무의 핵심으로 군사작전 계획을 의미하는데, 일본의 경우 帷幄上奏權은 大本營 참모총장 고유의 임무였다.<sup>37)</sup> 유약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던 것은 각국 총장이 상위차원의 군사기획 및 작전수립을 담당한다는 것을 뜻했고, 이들의 집합체인 원수부가 유사시 국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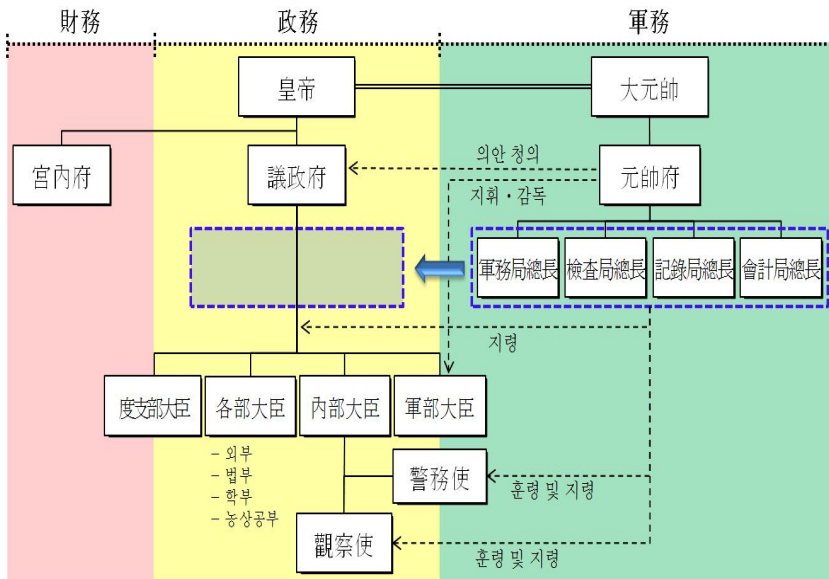
36) 서영희, 앞의 책, 2003, 80쪽.

37) 일본의 경우 유약상주권의 확보 여부를 군권의 장악 정도로 파악한다. 1893년 이래, 陸軍參謀總長만이 보유했던 유약상주권은 1903년 12월 28일 개정된 「戰時大本營條例」의 반포를 통해 海軍軍令部長도 공유하게 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일본군의 운영은 육군주도에서 양군연계로 전환되었다고 평가된다. 權九熏, 「大韓帝國期日本軍의 侵略과 民族의 抵抗(1897~1910)」, 建國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00, 49~51쪽 참고.

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한편 유약상 주권 정립 그 자체는 일면 전쟁을 대비하는 성격의 것이므로 대한제국의 위기의식 또한 관제개정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수부가 의정부에 의안을 청의할 수 있는 권한은 5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는 원수부 국장이 각부대신에게 知照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指令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경무사·관찰사 이하에게는 訓令할 수 있게 되었다. 지령 및 훈령은 그 자체로 원수부가 각부의 상위에 위치하는 조직임을 알리는 것이었다. 특히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경무사와 지방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관찰사에 대한 통제력 부여는 유사시 효과적 대응이 가능하게끔 지휘체계를 일괄적으로 정립한 것이었다. 점증하는 대외적 위협의 현실성에 따라 국가체제와 운영의 중점이 군사에 집중된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그림 1] 원수부 관제개정(1900. 3. 20) 이후 정부조직 관계도



이상의 관제개정을 통해 고종은 대원수로서 정체성을 발현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세부내용을 살펴볼 때, 관제개정은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방식은 최고군사기관인 원수부를 각부의 상위에 위치시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주지하다시피 전쟁 발발시에는 각 영역의 유기적 협조가 요구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조직에 대한 원수부 통제력을 대폭 확대한 것은 차후 발발할 위기에 관한 대처를 원수부가 총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유사시 군무담당 기구가 정무담당 기구에 대해 ‘指揮命令權’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원수부의 권한을 극대화시키는 가운데 대원수의 통제권을 재차 강조하며 황제에 귀속된 계통적 질서 또한 동시에 강화하였다. 이처럼 대외적 위기로 인해 군무정사는 격상되었고, 국방의 최고사령부인 원수부는 기존 정부조직을 상회하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군사비에 대한 지출이 확대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만성적인 세입부족에도 정부는 군비를 확충하였고,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의 예비비용이나 내장원의 자금까지 동원하여 군사비를 지원하였다.<sup>38)</sup> 특히 정부의 재정지출이 균형을 잃은 가운데서도 군인에 대한 월급은 우선 지급되었고, 전투장비 및 군수품에 대한 개발비 투자와 수입도 병행되었다.<sup>39)</sup> 부국강병의 실행노선으로 ‘군비축소를 통한 재정안정’과 ‘군비확대를 통한 군사력 증강’으로 양립된 이중적 시각이 존재했던 당시 상황에서 국방과 경제는 상호 보완적 성격보다 마찰적 관계로 이해되었지만,<sup>40)</sup> 대한제국 정부는 고조된 외압에

38) 이윤상, 「대한제국기 황실 주도의 재정운영」, 『역사와 현실』 26, 1997, 116쪽.

39) 이윤상, 위의 논문, 1997, 120쪽 ; 양상현, 앞의 논문, 2006. 202~204쪽 참고.

40) 『皇城新聞』 1900年 2月 22日, 論說 「兵強不如國富」.



대한 군사적 방비 마련을 우선순위로 고려했던 것이다. 따라서 정부 총 예산이 약 4.9%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사 예산은 오히려 약 15.1% 증가추세를 보였다.<sup>41)</sup>

따라서 재정적 역량이 뒷받침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군비확충을 단순히 조세행정·재정운용 등 경제적 문제를 유발한 ‘비합리적’ 조치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시기별 타국의 군비확충 추이와 외압의 증위 및 강도에 대한 이해를 병행하여 이러한 지출 구조가 정립되었던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러시아와 일본은 총 정부예산 중 군사 관련 지출에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한제국을 위협하는 ‘잠재적 침략 세력’이었고, 그 잠재성은 개입명분의 포착에 따라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국정운영의 중심이 군사부문에 집중되었던 것이고 재정 역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용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대외적 위기 상황에 따라 대한제국은 군사제도의 정비와 군비 확충을 통해 군사적 관점이 가장 우월한 국가, 즉 국정운영에 있어 군사를 제 분야의 우위에 둔 국가로 거듭나게 되었다. 다만 전술한 조치들은 팽창을 위한 침략적 속성이 배제된, 철저히 생존을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 보편적으로 군사제도의 발전과 무기의 개발, 그리고 이들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전장에서의 충돌, 즉 전쟁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유발하여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sup>42)</sup> 그러나 대한제국의 경

41) 1899년 정부 총예산 6,471,132원 중 군사예산은 1,498,337원으로 약 23.2%의 비율을 차지했으나, 1900년 정부 총예산이 이전대비 4.9% 감소한 6,161,871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예산은 15.1% 증가한 1,733,207원으로 약 28.1%를 차지하였다.(양상현, 앞의 논문, 2006, 206쪽) 이후 1901년부터 군사예산은 정부 총예산 가운데 38%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군무의 중요성에 기인한 군사우위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 Charles Tilly 著, 이향순 譯,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 : 강압·자본과 유럽국

우 외부로부터 전이된 위협과 이에 대한 저항의 차원에서 군사가 국가체제 유지에 기능할 수 있는 내적구조가 정립된 것이었으므로 특수성을 지닌다. 이후의 군사운영 양상은 대내외적 위협이 현실로 나타난 당대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맥락과 대한제국 내부의 동향을 동시에 살핌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 3. 대내외 위기에 대응한 원수부의 군사운영과 지향 목표

#### 가. 국경지역 병력 증강과 방어태세의 강화

1900년 3, 4월부터는 청국내부의 분쟁이 예상되어 막별이군 수백 명이 배를 타고 인천으로 피난 온다는 소문<sup>43)</sup>, 산동지역 인민 만여 명이 평안도로 건너온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하는 등<sup>44)</sup> 국경지역의 혼란은 심화되었다. 특히 1900년 6월, 의화단 교도들은 北京 외국공사관을 포위 공격하였고, 이는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다.<sup>45)</sup> 이후 청국의 보수정권은 의화단과 합세하여 1900년 6월 21일, 열국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

가의 발전』, 學問과 思想社, 1994. 109~154쪽 참고 ; Poggi Gianfranco 著, 박상섭 譯, 『근대국가의 발전』, 민음사, 1994 ;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1500~1900』, 나남출판, 1996, 13~23쪽.

43) “청 연태로부터 청국 막버리군 스백 오십명이 창용환을 타고 인천에 도박하였는디 재명일 미장환편에 오백여명이 나온다더라.” 『태국신문』 1900年 3月 22日, 잡보.

44) “청국 산동 근방에 민란이 일어나고 또 그 지방은 살기가 극란홀뿐더러 외국 조계가 된 까닭에 장래에 분란이 조조 일어날가 예탁하고 그곳 인민 만여명이 평안도로 건너오라고 혼다더라.” 『태국신문』 1900年 4月 17日, 잡보.

45) 이은자, 2015, 「로컬의 관점에서 본 清末의 義和團運動」, 『사림』 51, 129쪽.

고,<sup>46)</sup> 이를 기점으로 연합군에 의한 의화단 토벌은 대대적으로 단행되었다.

청국에서 전개된 진압작전으로 의화단 교도는 물론 청국 정부군, 만주의 비적, 지역주민들은 연합군의 토벌을 피해야했고,<sup>47)</sup> 이는 곧 국경을 인접한 대한제국 북부지역의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로 나타났다.<sup>48)</sup> 심지어 이들은 황해도 및 삼남지역에까지 떠돌며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하였다.<sup>49)</sup> 이러한 양상에 대해 당시 궁내부 고문관이었던 샌즈(W. F. Sands)는 의화단사건의 확장이 차후 대한제국에 대한 열국의 개입을 야기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sup>50)</sup> 한편 5월부터 내한 중이었던 주청 프랑스 무관 비달(Vidal) 소좌 역시 대한제국 정부에 대규모 병력 증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sup>51)</sup> 따라서 비록 국경지역의 침략주체를 명확

46) 車瓊愛, 2005, 「의화단진압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대응」, 『明清史研究』24, 289쪽.

47) James L. Hevia, “Leaving a Brand on China: Missionary Discourse in the Wake of the Boxer Movement”, *Modern China* Vol.18, 1992, pp.304-305.

48) 의화단사건으로 대한제국으로 건너 온 청국 피난민은 당대 외교사로 및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된 바만 해도 14,000명 이상이었다. 또한 연합군의 본격적 토벌이 시작된 후 청국패잔병과 청비에 의해 발생한 인명살해·재화탈취·방화는 함경도 및 평안도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다. 車瓊愛, 의화단진압전쟁이 한국의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 『中國近現代史研究』23, 2004, 75~80쪽 참고.

49) 황현 著, 임형택 외 譯, 『역주 매천야록』下, 문학과지성사, 64쪽(1900년 7월).

50) 샌즈는 의화단사건이 확산되자 “나는 어떤 반외세의 불똥이 우리 측에 대한 갑작스런 분노를 부채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혀 확신할 수 없었으므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예의주시하였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였다. Sands, *Undiplomatic memories : the Far East 1896-1904*(New York : Whittlesey House), 1930, p.163.

51) 러시아 육군성에서 러시아 황제에게 보고한 대한제국의 군사현황 관련 문서에는 대한제국의 병력증강에 관한 안건이 청국주재 프랑스군사무관 비달에 의해 건의된 것이라 명시되어 있다.(朴鐘淳 編著, 앞의 책, 2002, 573쪽) 한편,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는 “작년(1900년) 5~6월경 비달이 來韓한 적이 있고, 현재(1901년)는 군사고문으로 임명되고자 하는 야심으로 運動하고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駐韓日本公使館記錄』16, 機密第3號, 1901년 1월 7日, 林公使 → 加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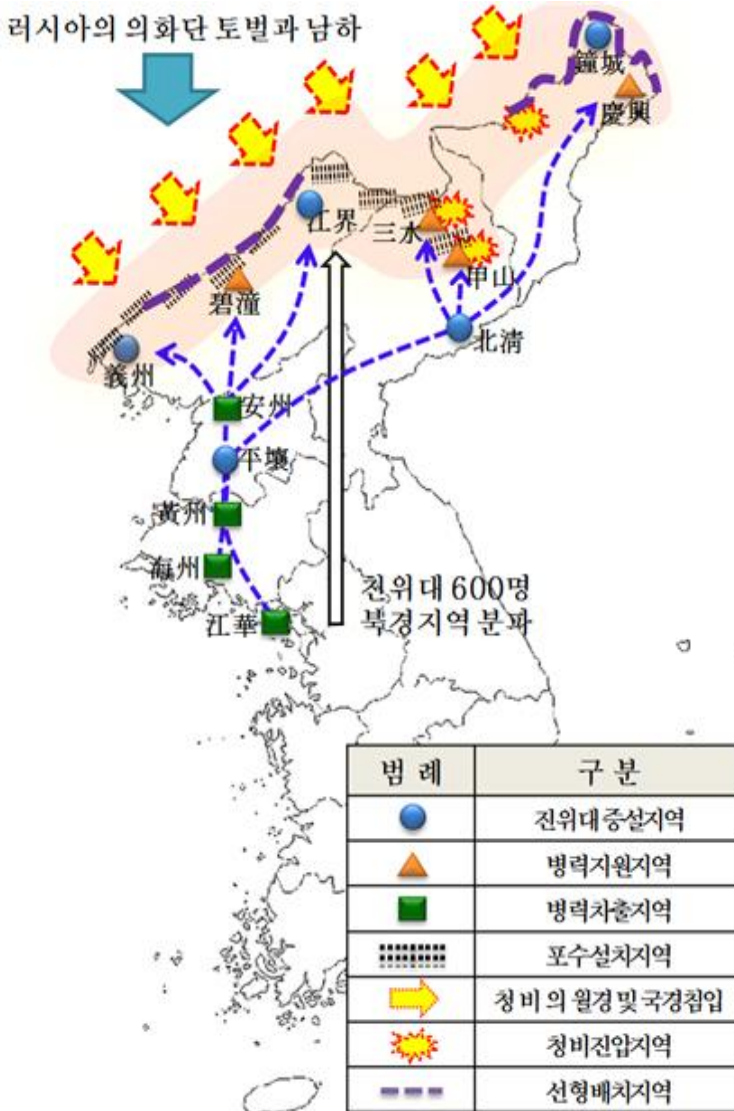
히 구분할 수는 없었지만,<sup>52)</sup> 그 피해가 확산되고 나아가 외세의 개입을 불려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대한제국 정부는 국경 지역의 병력을 증강시켰고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급변과 그에 따른 대외적 위협의 고조에 따른 대책이 수립된 것이었다. [그림 2]는 당시 원수부가 시행한 병력 증원 및 전개 양상을 도식한 내용이다.

---

外務大臣) 위 사료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프랑스 장교 비달이 의화단진압전쟁 발발 직전 대한제국으로 건너왔고, 대대적 병력 증강을 대한제국 정부에 건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52) Malozemoff Andrew 著, 석화정 譯, 앞의 책, 2002, 200쪽.

[그림 2] 의화단진압전쟁 발발 이후 北境지역의 병력운영 및 배치도



고종은 변경을 굳게 지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언급하며 국경지역에 대한 병력 증강을 원수부에 지시하였다.<sup>53)</sup> 이후 평안북도 의주 및 강계, 함경남도 북청, 함경북도 종성에 진위대를 설치하는 안건은 원수부에 의해 고안되었다. 고종은 설치 목적을 ‘義和團徒의 境界流人 防止’이라 언급하였다. 각 대대별 구성원은 1,030명으로 의화단 방비를 위해 총 4,120명이 국경지역에 배치하도록 계획된 것이었다.<sup>54)</sup>

증설하도록 계획된 각 진위대의 경비는 125,254元 10錢으로 총 501,016元 40錢이었다. 이 금액은 당시 군사 예산 1,636,704원의 약 30.6%에 해당했으며, 정부 총 예산 6,161,871원의 약 8.1% 수준이었다.<sup>55)</sup> 군비에 투자된 예산 비율과 특히 북방지역의 진위대 증설에 투자된 군사 예산 비중을 살펴볼 때, 군사 분야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 국경지역 방비가 핵심과제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3) “捍邊固圉 有國之急務 而西北兩界尤爲緊重 增兵警備 不容少緩. 其令元帥府編制以入.” 『高宗實錄』 光武 4年 6月 16日.

54) 『官報』 光武 4年 7月 3日.

55) 1900년도 군부 예산 및 정부 총예산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였음. 서인한, 앞의 책, 해안, 2000, 136쪽.

[표 4] 義州·江界·北靑·鍾城 진위대 장교 편제 및 실제인원(1900. 7)<sup>56)</sup>

구 분	참 령 (대대장)	1·2·3등 군사 (향 관)	정 위 (중대장)	부위 및 참위 (부관 / 무기주관 / 소대장)	
각 대별 편제	1	2	5	22	
총 편제(기준)	4	8	20	88	
실제 인원	총 계	4	8	18(-2)	72(-16)
	의 주	1	2	5	20(-2)
	강 계	1	2	5	20(-2)
	북 청	1	2	4(-1)	16(-6)
	중 성	1	2	4(-1)	16(-6)

원수부에서는 1900년 7월 18일, 의주·강계 진위대 간부를 임명하였고, 이어서 동월 23일에 북청·중성진위대 주요 간부를 편성하여 임지로 파송하였다.<sup>57)</sup>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원수부는 중앙군이었던 친위대 위관과 병정 600명을 추가로 국경전역에 파견시키기도 하였다.<sup>58)</sup> 당시 북청지방대는 대부분 삼수·갑산 군에 출주하여 청비를 수비하고 있었고, 추가로 후창군 일대로 일부 병력을 이동시켰다. 한편 의주·강계·벽동군에는 각각 해주·안주·황주의 군대를 각 100명씩 총 300명이 지원하게끔

56) 『元帥府奏本副』 1, 光武 4年 7月 18日 ; 7月 23日.

57) 여기서 특기할 것은 제1회 무관학교 최우수 졸업생 장영창과 3등 졸업생 장행원의 최초부임지는 북청, 2등 졸업생 박용준은 중성이었다는 점이다. 우수한 초임장교의 국경배치는 해당시기 국방의 중요지역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단서이다.

58) “元帥府에서 親衛隊尉官과 兵丁六百名을 派送하야 北靑等地에 駐劄하고 淸匪의 不虞『預備』하기로 來月十日頃에 前往하타더라.” 『皇城新聞』 1900年 6月 30日, 雜報 『派兵鎮北』.

하였다.<sup>59)</sup> 또한 강화에 주둔중인 1연대 중 100명을 경운궁내 平成門에서 교련시킨 후 경흥으로 이동시키기도 하였다.<sup>60)</sup>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경지역에서의 방어는 소수병력이 주요 거점을 장악했던 ‘點形防禦’에서 병력의 증강에 따라 국경선에 부대가 보다 주밀하게 배치된 ‘線形防禦’의 형태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분쟁발생지역으로의 중앙군 파송, 타 지역 병력의 국경지원 등은 이 시기 군사운용의 성격이 대외적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방증한다.

또한 원수부는 지방군을 진위대로 통칭할 것<sup>61)</sup>과 더불어 연대로 편제하였다.<sup>62)</sup> 1개 연대에 3개 대대가 편성되는 것으로 이는 병력증강을 의미하였다. 주목할 점은 기존에 독립부대로 운용되던 공병, 치중병을 보병부대로 귀속시킨 조치였다.<sup>63)</sup> 전투지원부대의 배속은 단위 연대의 전투력 발휘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특히 작전환경에서 제병협동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조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의화단 진압을 위해 러시아는 1900년 6월 중순, 만주의 경비대 인원을 6천명에서 1만 1천명으로 증원하였고,<sup>64)</sup> 동년 7월 9일부터는 아무르강 연안 및 시베리아 지역의 정규군을 만

59) 『皇城新聞』 1900年 7月 20日, 雜報「西北派兵」;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5, 1900年 7月 21日, 在平壤分館 主任 外務書記生 新注順貞 →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60) “Corean Govt. are sending 100 troops from 江華 to 慶興 on 豆滿江 to guard against any possible disturbance in consequence of the existence of the state of war beyond the border. The troops are proceeding overland.”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5, 1900年 8月 30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 外務大臣 子爵 青木周藏; 『東京朝日新聞』 1900年 9月 5日, 朝鮮特電「韓國北境の警備」.

61) 『官報』 光武 4年 7月 23日.

62) 『官報』 光武 4年 7月 27日.

63) 鄭夏明, 앞의 논문, 1975, 55쪽.

64) 金正煥 『露日戰爭과 프랑스의 對韓政策』, 『韓佛修交100年史』, 韓國史研究協議會, 1986, 171쪽.



주로 출병시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청국 북동지역의 黑龍江省, 吉林省, 奉天을 차례로 장악했으며, 7월 23일에는 愛琿 일대를 점령하였다. 당시 만주지역의 질서회복과 동청철도의 안전보장이 출병의 명분으로 내세워졌으나,<sup>65)</sup> 철군성명 이후에도 군은 주둔하고 있었다.<sup>66)</sup> 이후 러시아는 대한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제안하며 한반도 진출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北淸事件이 뜻밖에도 중대하게 되어 드디어 滿洲·遼東 지방에서까지도 淸國 비적과 합세하여 마음껏 창궐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러시아는 大兵을 움직여 이를 소탕하려고 한다. 그 여파가 한국의 변경에 파급되어 필경 비적의 침입을 면치 못할 것인데, 그 경우에 한국 군인이 이들을 잘 방어할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 는 의문이다. 오히려 한국을 위해 러시아의 원조를 구하고 이와 협동해서 변경의 방비에 임하여 비적의 침범을 방어하는 것이 득책일 것이다.<sup>67)</sup>

위와 같은 주한 러시아공사 파블로프의 제안에 대해 고종은 그 자리에서 자구책을 마련했으니 타국 병정의 원조는 불필요하다고 의사를 표명하였다.<sup>68)</sup> 국경전역에 걸쳐 선형방어를 주밀하게 실현한 근본적 이유도 청비토벌을 명분으로 만주에 주둔 중이던 러시아 병력이 국내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러시아의 남하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될 일본의 병력진개를 방지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청비의 침략 저지는 국외세력의 폭력이

65)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 침략』, 지식산업사, 2007, 299쪽.

66) 강정일, 「지정학적으로 본 러시아제국의 對한반도정책(1884-1904) -평창원인과 실패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243쪽.

67) 파블로프가 고종 알현시 권고한 내용은 그 중요성에 따라 즉각적으로 주한일본 공사관에 의해 본국 외무성으로 보고되었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機密第 75號, 1900年 8月 6日, 林 公使 → 外務大臣 子爵 青木周藏.

68) 고종은 수비병을 義州 방면에 파견하였고, 江界에 신설 부대를 모집하고 서북의 국경 일대의 땅에 1만 정도의 군사대비를 계획 중이므로 당장 타국의 원조가 불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機密第 75號, 1900年 8月 6日, 林 公使 → 外務大臣 子爵 青木周藏.

개재되어 있는 개입 요인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활동이었던 것이다. 실제 파블로프는 본국 기밀 서한에 대한제국이 청비가 영토로 진입하기 이전에 러시아와 일본에 의지하지 않고 돌발사건을 예방하거나 제거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sup>69)</sup>

이는 청비의 대규모 소요가 사라진 시점에도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해 국경지역에 병력을 증강한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북경지역에는 여전히 군수물자가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었고,<sup>70)</sup> 원수부는 이후 평양에 1개 대대를 추가로 증설하였다.<sup>71)</sup> 뿐만 아니라 會寧·鐘城에 100명, 穩城·茂山에 200명, 회령과 종성 사이의 行營에 400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도 하였다.<sup>72)</sup> 국외세력의 침략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꾸준한 증병이 있었던 것이다.<sup>73)</sup>

이후에도 청비는 지속적으로 소규모 소요를 일으켰다. 그러나 한층 강화된 국경지역에서의 방어를 통해 대한제국은 자체적 능력으로 청비의 국지적 침략을 격퇴할 수 있었다. 함경도 무산군에 출주중인 소대가 청비 37명을 죽이고, 말·총포 등 전리품을 얻기도 했고,<sup>74)</sup> 삼수군에 주둔중인 5연대 2대대 예하 병력이 청비 400명을 격파하기도 하였다.<sup>75)</sup>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군 500

69) 국사편찬위원회 編,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2, 2009, PTABMΦ, ф. 32, оп. 1, д. 57, лл. 28~30об.

70) 『東京日日新聞』1900年 9月 7日, 「軍銃二千挺轉送」.

71) 『官報』光武 4年 9月 21日.

72) 『駐韓日本公使館記錄』15, 機密京第3號, 1901年 3月 22日, 城津分館 主任 川上立一郎 →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73) 璦春에 주둔중인 러시아 군은 청비 초토를 위해 남하하고 있었으므로, 고종은 청비를 축출하는 국경의 각 부대에 러시아군과의 마찰을 방지할 것에 대해 戒告하였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14, 1901年 1月 4日,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 外務大臣 加藤高明.

74) 『東京朝日新聞』1901年 5月 1日, 朝鮮特電 「咸鏡道の馬賊」.

75) 원수부 검사국 총장 민영철은 '수비하여 위력을 떨친 가상한 일'이라 평가하며 포상

명이 두만강을 도강하여 청비 40명을 살해하는 등 공세적 행동을 취하기도 하였다.<sup>76)</sup> 이처럼 침략의 명분을 대한제국이 사전에 제거했으므로 러시아의 남하는 실현될 수 없었다.

이후 원수부 검사국장 趙東潤은 관서찰변사였던 부장 李道宰와 5연대 3대대 참령 金元桂의 보고를 토대로 1901년 봄·여름 동안 변경의 비적이 출몰할 때, 노고한 위관 및 수비에 조력한 인원에 대해 포상을 건의하였다. [표 5]는 비적방어 유공으로 승서된 인원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 5] 匪賊 방어 유공에 따른 승서 대상(1902)<sup>77)</sup>

책임지역		대 상	책임지역		대 상	책임지역		대 상
平安 北道	伐登鎮	부위 정민화	平安 北道	泰川	군수 조정윤	咸鏡 北道	會寧	정위 성창기
	滿浦鎮	참위 김홍식		溇源	참위 유인균			참위 변영두
	高山鎮	참위 이교상		厚昌	참위 문희선			참위 흥언표
	趙山	참위 이조영		寧邊	참위 남상학			鍾城
		포사총 이택규	咸鏡 北道	穩城	정위 김사직	정위 반돈식		
	朔州	참위 전두현		慶源	참위 이응주	茂山	부위 내영훈	
	慈城	참위 홍병헌		訓戎	참위 김원흥		군수 김병주	
		군수 박항래				사포영장 최병룡		

을 건의했고, 이에 고종은 위험을 무릅쓰고 비적을 소탕한 것을 치하하였다. 위관은 陞敍, 正校 김승표는 위관으로 陞差, 그 밖의 副校 이하는 자리가 나는 대로 등급을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承政院日記』 光武 5年 5月 17日.

76) 朴鐘孝 編著, 앞의 책, 2002, 222쪽(1901년 6월 7일, 주한러시아대리공사 파블로프 → 외무성)

77) 『承政院日記』 光武 6年 5月 6日 ; 5月 13日 ; 7月 11日 ; 7月 20日.

대상자들은 전초기지인 分站의 위관급 인원이거나 각 군에 소속된 포수 및 군수였고, 군공이 인정되어 모두 승서되었다. 이외에도 다수의 군인들에 대해 加資 및 熟馬·兒馬 지급 등 대대적 포상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원수부에 의해 다수의 병력이 배치된 1900년 이후에는 청비의 침략에 대한 국경방어는 원활히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제한적이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 달성에 성공한 군사적 대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국경지역의 병력운용은 외부적 위협의 강도를 파악하고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sup>78)</sup>

국경지역에서의 방어태세가 확립된 후, 비교적 안정된 국면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 1901년 12월에는 度支部에 의해 병력운용의 축소가 건의되기도 하였다.<sup>79)</sup> 그러나 당시 원수부 군무국총장이었던 이종건은 긴급사태가 발생한다면 병력동원이 어렵고, 국내의 토비가 여전히 빈발한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며 현재는 ‘減兵’이 아닌 ‘加兵’의 시점이라고 주장하였다.<sup>80)</sup> 군의 역할은 내부소요의 진압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 나. 지방 진무 및 내부 안정을 통한 외세의 개입 차단

국경지역의 병력증강을 통한 방어태세 강화로 국외세력 진출은 차단되었지만, 병력출주와 그에 따른 주둔지역의 경비지급 문제는 민·군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군 주둔지역으로 경비지

78) 기존연구에서는 1899년 이전에 발생했던 청비의 침략과 대한제국의 군사적 대응만을 토대로 이 시기 국경에서의 방어는 ‘형편없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조재근, 앞의 논문, 1996, 130~131쪽.

79) 현광호, 앞의 책, 2002, 266쪽.

80) 『元帥府來文』3 光武 6年 2月 18日.

급에 대한 책임이 이관되었기 때문이었다.<sup>81)</sup> 군비수취 및 지급 문제로 각지에 출주중인 군인의 비위행위가 빈번해지자 육군참장 白性基는 憲兵隊를 설치하여 군인들에 대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종은 이를 받아들여 1900년 6월 30일, 원수부에서 작성한 「陸軍憲兵條例」를 반포하였다.<sup>82)</sup> 헌병대는 원수부 예하기구로 군사경찰 업무를 관장했고, 초대사령관은 회계국 총장 민영환이 겸임하였다.<sup>83)</sup>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헌병대를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공사 파블로프의 대한제국군에 대한 회의적 인식은 여전하였다. 그는 “대한제국군이 양민 괴롭히기를 보통으로 여기므로 비적을 막기 이전에 소요를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러시아군의 남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sup>84)</sup> 이에 대해 고종은 지방에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장교 임명에 신중을 가하였고, 군기 확립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중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였다.

실제로 1898년 이래로 장교충원의 대부분은 무관학교를 통해 시행되었다. 제 1회 무관학도 모집 시 정원 200명에 1,700명이 지원하였다.<sup>85)</sup> 이를 통해 무관학교 입학 경쟁률이 8.5:1로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발된 200명 중 원수부의 임관 전 최종시험을 통과한 인원은 128명이었는데, 입학 인원 중 64%만이 참위로 임관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무관학교 재개 이후 장교 선발의 기준이 향상되었고 구성원의

81) 탁지부는 관찰사 및 군수를 독촉하여 신속한 군부대 운영비 납부를 훈령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군비지급은 난항을 겪었다. 김기성, 2013, 앞의 논문, 215~217쪽.

82) 『官報』 光武 4年 7月 3日.

83) 『官報』 光武 4年 8月 6日.

8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 機密第75號, 1900年 8月 6日 林 公使 → 外務大臣 子爵 青木周藏.

8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3, 報告第44號, 1898年 6月 14日 加藤 辨理公使 → 西 外務大臣.

질적 증대가 실제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종은 1900년 7월 17일 「軍隊內務書」의 배포를 통해 군사적 비위행위를 막고자 했으며, 8월 1일에는 조령을 내려 북경지역에서 군대가 폐단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번에 새로 설치한 西北兩界의 鎭衛各隊의 領尉官을 元帥府로 하여금 招待하여 隊伍를 嚴束하여 추호도 地方에 胎弊함이 없도록 할 것을 布諭하고 이미 赴隊한 자는 一體 訓飭하여 違反함이 없게 할 것을 分付케 하라.”<sup>86)</sup> 라고 앞서 지시해 놓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세력이 대한제국 내부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서 개입명분을 찾기 시작하자, 고종은 추가적으로 원수부에 지시하여 이전부터 준비해 온 「陸軍法律」을 서둘러 반포했고<sup>87)</sup>, 陸軍法院을 별도로 설치하여 군인 범죄에 대한 심판을 전담시켰다.<sup>88)</sup>

한편 즉각적인 조치는 중앙관료의 파견을 통해 부대 형세를 시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경도 및 평안도로 이동하여 출주군의 정세를 살피라는 지시가 원수부 회계국장 겸 헌병대사령관 부장 민영환과 의정부찬정 부장 李允用에게 내려졌고 이들은 진위대 순찰사로 임명되어,<sup>89)</sup> 국경지역의 동향을 탐색하고 군인의 비위행위를 파악하였다. 이후 고종은 평안북도 관찰사 李道宰를

86) 『官報』 光武 4年 8月 3日.

87) 기존연구에서 「陸軍法律」의 반포가 서둘러졌던 결정적 이유는 1900년 7월에 일어난 친위대 상등병이 시위대 부위를 구타한 사건과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의 미정립으로 언급된다.(김혜영, 「갑오개혁 이후 軍司法制度의 개혁 - 「陸軍懲罰令」과 「陸軍法律」을 중심으로-, 『軍史』 89, 2013, 130~131쪽) 그러나 각 부대 간의 알력이나 계급간의 갈등, 군인의 민간에 대한 비행 등은 이전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의화단진압전쟁 발발 이후 국외세력이 다방면에서 개입명분을 찾고 있던 당대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반포시점을 서둘렀던 배경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88) 『承政院日記』 光武 4年 9月 14日.

89) 황현 著, 임형택 외 譯, 앞의 책, 68쪽(1900년 8월).

찰변사로 차하하며 요새지 구축을 통한 방어 실현과 더불어 부대 지휘관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sup>90)</sup> 국경지역 이외에도 내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소요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1900년 초부터 東學·英學黨의 잔존세력이 각지에서 재봉기하였으며, 1900년 3월부터는 活貧黨이 조직적 활동을 펼쳐 국지적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경기·충청·경상·전라 등지에서 부민을 겁락하거나 장시를 약탈했고, 바다로 진출하여 연해지역에서는 水賊활동을 자행하였다.<sup>91)</sup> 특히 정부는 이들을 일본망명자 및 유인석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sup>92)</sup> 당시 박영효 등의 일본 망명자들은 정계복귀를 획책하며, 국내복귀를 위해 수하들을 국내에 잠입시켜 국내 동향 파악, 자금 및 무기 마련, 나아가 우호세력들을 규합하고자 하였다. 한편 懷仁·通化縣 일대에서 항일활동을 지속하였던 유인석은 1895년 발생한 乙未事變에 대한 복수를 위해 국내에 잔존했던 추종세력과 월경민을 취집하여 국내진입을 계획하고 있었다.<sup>93)</sup>

따라서 북경지역 지원 병력을 제외한 중앙군은 수도에서의 정변 발생에 대비하였다. 당시 총 6,500명의 병력이 수도를 방어하고 있었는데, 특기할 점은 평양진위대 1,000명이 한성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sup>94)</sup> 이러한 병력 전용은 내부소요와 연계

90) 『官報』光武 4年 8月 22日.

91) 朴贊勝, 「活貧黨의 활동과 그 성격」, 『韓國學報』10, 1984, 120~124쪽.

92) 국내에 잠입한 망명자 수하세력들이 자금을 확보한 행태가 활빈당의 활동과 유사했으므로 대한제국 및 일본정부는 이들을 활빈당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한편 유인석과 활빈당의 연계는 그들의 사용 무기와 거동의 유사성을 통해 관련 집단으로 인식되었다.

93) 『駐韓日本公使館記錄』13, 往228, 1900年 9月 14日, 林公使 → 青木外務大臣; 『駐韓日本公使館記錄』15, 公信第14號, 1900年 9月 22日, 在平壤分關主任 外務書記生 新庄順貞 →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皇城新聞』1901年 1月 5日, 雜報 「柳發通文」.

94) 당시 중앙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는 親衛隊 3,000名, 侍衛隊 2,000名, 平壤兵 1,000名

될 가능성이 있는 시국사건을 대처하기 위해 수도방어가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인 주둔 병력의 배치가 파악되는 1902년에 이르러 총 병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 한성과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던 이유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sup>95)</sup>

한편 火賊집단에 대한 진압 및 지방 진무는 각지에 주둔중인 진위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화적집단 출몰지역에 대한 정규군 파송은 상황의 신속한 진압을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군대출주 자체는 해당지역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었기에 효과적이었다.<sup>96)</sup>

---

砲隊兵 400名, 馬隊 100名으로 총 6,500名이었다. 『대국신문』 1900年 9月 19日, 잡보  
95) 김기성, 앞의 논문, 2013, 203쪽.

96) 주한일본 군산분관 주임이었던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가 활빈당의 위협정도에 대해 질문하자, 당시 정읍군수였던 김정규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인 지리산에서 활동했던 700~800명의 활빈당으로 인해 지방 인민들은 최초로 크게 두려워했으나, 求禮郡·雲峰郡·河東郡·咸陽郡에 군대가 주둔하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5, 京公第14號, 1900年 10月 30日, 在群山分館 主任 淺山顯藏 → 在京城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표 6] 火賊集團에 관한 국내외 언론보도 내용(1900~1901)

구 분	주요내용	출 전	
1900	3. 24	공주지방대 병정이 옥천군에서 활빈당 비도를 공격, 남은인원은 상주로 도망침.	『데국신문』
	4. 9	문경, 괴산 등지에 활빈당 천여명이 무장하여 둔취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각 군에도적 천 여명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고 있음.	『데국신문』
	4. 12	兩湖 등에 비류가 각지에서 분란을 일으키며, 흑 활빈당이라 칭하고 화재, 약탈을 자행하니 원수부에서 각지 지방대병을 파송하여 기도 초멸을 지시함.	
	8. 27	호남등지에서 소위 활빈당이 수십·백 명이 군집을 이뤄 재산을 약탈하니 관찰사 및 군수가 정부에 조치해주시기를 요청함.	『皇城新聞』
	9. 7	울산, 영천, 경주 등지에서 활빈당이 창궐하니 각지에서 분란을 일으키며, 수십 명씩 작당하여 재산을 약탈하고 전라도 용담 등 군에서도 피해가 많았음.	
	9. 9	정부는 경상도에서 발기한 활빈당을 진압하기 위해 고성주둔 진위대를 파송함.	『東京日日新聞』
	9. 19	고성지방대 소대장이 밀양활빈당 진압을 위해 원수부 전칙을 받은 후 양산으로 가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 적당 11명을 잡았음.	『데국신문』
	9. 24	활빈당 창궐에 관한 경남관찰사의 보고 이후, 원수부에서 지방대 1소대를 加派함.	『皇城新聞』
	11. 10	경상도에 활빈당이 재기하여 밀양, 울산 등 각지에서 활동하며 세력을 넓힘.	『東京日日新聞』
	12. 11	원수부가 경남관찰사의 보고를 받아, 諸郡의 적도 진압을 위해 1개 소대를 순초시킴.	
1901	12. 20	경남의 각군에 적경이 大熾하여 원수부에서 영·위관을 파송하여 울산군에 진위대병을 초모·演習하게 함.	『皇城新聞』
	6. 17	창원군 등에 화적당이 둔집하여 인민의 가산을 약탈하며 내외 국왕래행인을 겁탈하여 원수부에서 고성대를 파송하여 진압하게 함.	
	11. 14	경주에 폭민 400~500명이 발기하여 원수부에서 대구진위대에 토벌을 명함.	『東京朝日新聞』

[표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화적집단의 활동 때문에 대한 제국은 국경지역에 다수의 병력을 배치하였음에도 지방에 진위대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sup>97)</sup> 특기할 점은 화적집단 진압을 위한 원수부의 대응이 주요 거점에 진위대 병력을 분파하여 兵站所를 설치하고, 가용부대 병력을 상황발생지역에 파송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화적집단의 분포 범위는 넓으나 이를 저지해야 할 군대는 제한적이라는 현실적 상황 인식 때문이었다. 국경지역에서의 청비침략과 만주일대 주둔하며 군사원조를 제안했던 러시아의 존재로 인해 효율적인 가용병력 운용이 필요했던 것이다. 한편 이는 화적집단이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사전 예측이 힘든 지역에 출몰했고, 평시 병정이나 빈상으로 가장하여 정확한 규모를 노출하지 않았으며, 일정한 주둔지를 지니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동했던 행위 상 특징에도 기인하는 것이었다.<sup>98)</sup>

이외에도 원수부는 지방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들 간의 충돌 문제에도 개입하였다. 민란의 발생으로 인해 외국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지닌 국외세력의 군대파견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1900년 1월 23일 칙령 9호로 내려진 「城津郡廢止吉州郡合附件」에 의해

97) 기존연구는 이러한 단면을 통해 이 시기 군사기구 운영의 목적이 치안유지에 있었다고 평가하였다.(조재곤, 앞의 논문, 1996, 132쪽) 그러나 치안확보의 궁극적 목적은 외세의 개입차단에 있었다. 따라서 군대가 내란진압에 동원되었다는 것만으로 군대 운용을 경찰력으로 판단한 것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관련근거로 내세운 『國譯 韓國誌』 707쪽의 “현재의 한국 군대는 경찰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대한제국군의 병력운용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병력 수가 군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소규모였다는 것에 관한 러시아의 평가였다.

98) 『데국신문』의 기사에서는 “활빈당은 동으로 쫓아가면 서로 달아나고 남으로 따라가면 북으로 도망치는 까닭에 급습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데국신문』 1900년 3월 27일 잡보.

성진민요가 발생하였다.<sup>99)</sup> 상황이 확대되자 원수부는 북청진위대 25명을 파견하여 일본인을 보호했고,<sup>100)</sup> 출주병력의 성진주둔으로 인해 군민들은 해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인명피해가 없었음에도 일본은 불안한 형세를 운운하며 1개 중대 규모의 병력을 한국정부에 요청하였다.<sup>101)</sup> 이에 원수부는 25명만을 증파하여 사관 포함 총 병력 52명으로 해당 군에서 일본인을 보호하였다. 단순히 外部로부터 조희된 일본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병력을 투입하였던 것이다. 당시 대부분의 북청지방대는 삼수·갑산군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란진압 및 일본거류민 보호에 필요한 인원을 판단하여 배치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일정부분 원수부의 자주적 성격을 보여줌과 동시에 병력운용에서의 합리성을 보여준다.

한편 1901년에는 제주에서 천주교도와 비천주교도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여 제주민요<sup>102)</sup>가 발생하였다.<sup>103)</sup> 원수부는 강화진위대 100명을 제주로 파견하였고, 궁내부 고문관 샌즈도 사태 해결의 원만함을 위해 동행하였다.<sup>104)</sup> 이와 동시에 원수부는 제

99) 일본 역시 해당 민요에 관심을 기울였고 외국인을 보호할 것을 통지하며 관련 사건의 보도를 지속하였다. 『東京日日新聞』 1900年 8月 22日, 「韓國の暴徒に就て」; 8月 23日, 「韓國暴動の原因」; 8月 26日, 「朝鮮暴徒後報」; 8月 29日, 「城津暴徒の情報」.

100) 『皇城新聞』, 1900年 8月 24日.

101) 『駐韓日本公使館記録』 14, 機密送第五六, 1900年 10月 9日, 外務大臣 子爵 青木周藏 → 在韓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102) 교회사 연구자들은 이를 辛丑 濟州教案이라 언급하는데, 여기서 교안은 박해와 유사한 성격으로 일반 민중과의 갈등, 외교문제 등 복합적 의미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박정환, 「초기 제주도 개신교 형성사-이기풍 선교사 이전 현지인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교역사』 39, 2013, 183쪽.

103) 뮌텔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선교사가 억류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한 프랑스 군함 알투에르호(Alouette)와 서프라이스호(Surprise)가 즉각 이동하여 5월 31일에 제주에 도착하였다. 『뮌텔주교일기』 3, 58쪽(1901年 6月 4日).

104) 당시 궁내부 고문관이었던 샌즈는 제주에서의 민란을 직접 진압하여 내부 소요에

주도 인근 일본어민 보호에 대해 별도의 훈칙을 내리기도 하였다.<sup>105)</sup> 그럼에도 일본 군함 濟遠號도 연이어 제주에 입항하였다.<sup>106)</sup> 주재 일본 프랑스 공사였던 뒤바이(Dubail)는 해당 사건이 국제적 분규 상황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그의 본국에 보고하기도 하였다.<sup>107)</sup> 당시 일본 언론은 제주민란을 반외세운동이라 운운하며 의화단 사건에 비유하기도 하였다.<sup>108)</sup> 이에 원수부는 수원 진위대 200명과 순검 15명을 추가로 증파하며,<sup>109)</sup> 상황확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서프라이스호가 해안선에 접근할 당시 군중 무리 속에서 일장기가 발견되었고, 알루에르트호 정장 드벨루아(de Belloy) 해군대위는 일본인이 무기와 탄약을 제주도민에게 보급하여 선교사 살해를 주도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플랑시는 일본의 의도가 대한제국을 혼란에 빠뜨려,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한반도 내에 병력을 증가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의 본국에 알렸다.<sup>110)</sup> 따라서 1901년 6월 10일 민란이 진압되고 7월부터 주모자 및 관계자들이 수도 한성

---

대한 진압 능력을 대외에 보여줘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Sands, op. cit, pp.165-166.

105) 『元帥府來去案』 2, 1901년 5월 29일 ; 5월 31일.

106) 당시 제주도에 일본인 1명이 재류하고 있었고, 인접한 飛揚島에 150여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6, 館第11號, 1901년 6월 5일, 森川季四郎 → 在京城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107) 『프랑스외무부문서』 9, 1901년 6월 18일, 일본 주재 프랑스공사관 → 외무부장관 델카세, 118~119쪽.

108) 『鎮西日報』 1901년 6월 4일, 「韓國濟州島の民亂」; 『東京日日新聞』 1901년 6월 12일, 「濟州島事件」; 6월 16일, 「濟州島の民擾に就て」.

109) 『皇城新聞』 1901년 6월 8일, 雜報 「更派兵巡」; 한편 1901년 6월 13일, 러시아 정부에 파블로프가 상주한 보고서에는 추가진압군이 25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朴鐘濤 編著, 2002, 앞의 책, 234쪽.

110) 『프랑스외무부문서』 9, 1901년 7월 12일, 대한제국 주재 프랑스공사 플랑시 → 외무부장관 델카세, 119~121쪽.

으로 압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sup>111)</sup> 제주지역의 안정화는 중대한 외교적·군사적 문제로 남겨졌다. 원수부는 민란 진압을 위해 파견한 병력을 그대로 잔류시켰고, 11월 21일에 이르러서야 민심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한 후, 출주병력에 철수명령을 내렸다.<sup>112)</sup> 외세의 침략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원수부의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노력은 내부에서 발생한 소요진압 및 치안유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행되었던 것이다.

원수부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국경방어 및 내란진압 이외에도 파송 군인의 기강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활동도 병행하였다. 이는 군의 출주가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군 감찰을 위해 원수부 검사국 4명을 검사관으로 선발하여 각도로 파견하였다. 여기서 軍土를 불법으로 매매한 사건, 향관이 군인 월급을 미지급한 사건, 문서 장부를 조작하여 사졸들의 出駐費를 소대장이 횡령한 사건, 軍器成冊과 실제 무기수를 비교해본 결과 현황이 불일치한 사건, 병졸을 잡역에 종사하게 한 사건·인사 청탁·민가 약탈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sup>113)</sup>

뿐만 아니라 전사 군인에 대한 제사를 원수부가 담당하기도 하였다. 고종은 원수부 군무국 총장 이종건에게 제단 설치에 대한 지시를 추가적으로 하달하였고 원수부는 御營廳의 분원인 南小營에 遺址에 獎忠壇을 건립하여 복명하였다.<sup>114)</sup> 이후 원수부는 12월 10일 정오에 제사를 지낼 예정이니, 전쟁에서 사망한

111) 박찬식, 『1901년 제주민란 연구 : 근대 외래문화와 토착문화의 갈등』, 도서출판 각, 2013, 175쪽.

112) 『皇城新聞』 1901年 11月 21日, 雜報「召還華兵」.

113) 『訓令及照會』 1, 光武 5年 9月 3日, 20日, 24日 ; 11月 5日, 10日, 27日 ; 光武 6年 2月 5日, 20日, 25日.

114) 『高宗實錄』 光武 4年 10月 27日.

사졸의 유족은 이날의 班次에 참석하라는 내용을 관보에 광고하기도 하였다.<sup>115)</sup>

한편 고종은 충성이 있는 자에 대한 표창과 절개를 지키는 자에 대한 장려는 국가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언급하며 나라 일을 위해 죽은 자에 대한 제도적 보훈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sup>116)</sup> 이를 위해 원수부에 지시하여 「世祿表」를 만들어 등급을 분류하고 보상하도록 지시하며 「報勳政策」을 펼쳤다. 당시 원수부 검사국 예하 육군 법원장이었던 백성기가 “장충단을 세우고 전투에서 죽은 장교와 병졸의 제사를 지낸 뒤 군사들이 감격하고 고무되었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sup>117)</sup> 유공자에 대한 제사 및 그 가족에 대한 보상 등 정부차원의 활동이 군인 사기 진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원수부 검사국총장 백성기는 1894년 동학도 진압 시, 활약한 인물들에 대한 표창을 건의하였다.<sup>118)</sup> 특히 옥천전투에서 영관 廉道希가 비적들을 야간에 기습하여 탈취되었던 무기를 되찾아 왔던 전과와 전주전투에서 대관 李鍾九가 포석이 빗발쳤음에도 죽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다는 사례를 통해 이들의 용맹을 장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내부안정에 종사했던 군인들에게 충성·용기를 지닌 인물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상징적 표본’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군인의 사기를 양양시킬 수 있었고, 동시에 군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사회전반에 형성할 수 있었다. 이처럼 원수부는 내부 안정

115) 『元帥府來文』2, 光武 4年 10月 27日; 『官報』 光武 4年 10月 31日.

116) 『高宗實錄』 光武 4年 11月 11日; 『皇城新聞』, 1900年 11月 14日, 論說 「獎忠恤孤萬世盛典」.

117) 『高宗實錄』 光武 5年 2月 16日.

118) 『高宗實錄』 光武 7年 10月 17日.

을 위해 출주 군인의 기강 확립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 4. 맺음말

본 논문은 확장된 외부주체의 압력과 국내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추진된 대한제국의 국방정책을 군사적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대내외 정치상황의 변동에 따라 실재했던 위협의 정도와 대응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대한제국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군사적 대처를 시행했는지를 논증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를 통해 군사운영의 성격이 제한적이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구명하였다. 장절 구성에 따라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를 둘러싼 러·일의 군비경쟁 돌입과 군사행동 감행으로 대외적 위기가 고조되자, 원수부는 관서의 요충지인 평양에 병력을 2배로 증강하는 등 상황발생지역으로 신속히 병력을 전개할 준비를 마쳤다. 한편 청국 내부에서는 의화단교도의 활동이 확산되었는데, 원수부는 그 방비책으로 평안북도 연변 9읍과 함경남도 삼수·갑산에 포수를 배치하였다. 이처럼 대한제국은 대외적 위협의 정도를 판단하여 나름의 자구책을 시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900년 3월, 주청 외국공사들은 청국정부의 의화단진압 능력을 불신하여 본국에 군대를 요청했고, 이를 기점으로 청국 내 열강의 군대투입은 기정사실화되었다. 이에 대한 대한제국의 군사적 대처는 「원수부관제」의 전면적 개정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원수부 각국의 국장을 총장으로 승격하였고, 군사적 전문성

을 인정받은 관료 중심으로 총장급 인사가 단행되었다. 또한 총장에게는 유사시를 대비한 작전기획 및 계획수립에 관한 유약상 주권이 부여되었다. 뿐만 아니라 各部에 대한 원수부의 통제권 확보는 지휘체계를 정립하여 효과적인 군사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부국강병 실현에 대한 ‘이중적 시각’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으로 군비를 확장하여 군사재정은 국가 전체 예산운영의 중심이 되었다. 이처럼 대외적 위기에 따라 군무는 격상되었고, 정부는 군사우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1900년 6월 의화단진압 전쟁이 시작되었고, 인접국의 전쟁 상황은 국경에서의 문제를 수반하였다. 대한제국은 난민문제 및 청비의 침략 등을 막기 위해 평안·함경도에 진위대를 증설했고 타 지역으로부터 지원 병력을 차출하여 배치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대한제국의 국경방어는 주요거점들이 주밀하게 연결된 ‘선형 방어’로 전환되었으며 방어태세는 강화되었다. 이후 1900년 8월 15일 연합국의 북경점령으로 의화단진압전쟁이 사실상 종결되었음에도 러시아군은 잔존한 청비 진압을 명분으로 한반도 진출을 시도하였다. 러시아의 남방진출은 곧 일본의 북방진출과 충돌하게 될 것이었으므로 청비의 존재는 대한제국의 국방에 위협을 가하는 매개요인이었다. 따라서 대한제국은 청비의 대규모 소요가 사라진 시점에도 오히려 국경방어 병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국외세력의 침략적 개입을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였다.

이처럼 대한제국이 국경방어태세를 강화하여 개입 명분인 청비의 침략을 원활히 방어하자, 러시아는 군대 출주지역에서 발생한 민군 갈등을 문제시 삼으며 국내정치의 불안정에서 개입 명분을 찾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국내정치의 안정 또한 외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로 거듭났다. 당시 국내에서는



화적집단이 횡행하였고, 이들은 지역 사회에서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부는 이들이 일본망명자 및 유인석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진압과 지방 진무 역시 원수부의 총괄아래 실행되었다. 병력배치의 우선순위가 국경에 있었으므로 해당지역에서는 선형방어가 이루어진 반면, 화적집단에 대한 진압은 주요거점을 장악하고 이들의 출몰지역에 신속히 병력을 파견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한편 원수부는 성진, 제주에서의 민란을 진압하기 위해 병력을 출주시켰는데, 근본적 목적은 외국인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국외세력이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군대 파견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외에도 원수부는 군 기강 확립 및 사기진작을 위해 출주부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였고, 군인의 위상을 고양하기 위해 전몰장병에 대한 제사 및 보상과 같은 보훈정책을 실시하는 등 내부안정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제반 조치를 통해 원수부 주도의 군무정책 강화와 군사력 운용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18. 10. 8, 심사수정일 : 2018. 11. 15, 게재확정일 : 2018. 11. 19)

주제어 : 대한제국, 원수부, 군사제도, 군사정책, 군사운영, 군비확장, 의화단 사건, 국경방어, 내부안정

## 〈참 고 문 헌〉

### 1. 사료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官報』

『元帥府來文』(奎17783) 議政府(朝鮮) 編

『元帥府奏本副』(奎17784) 議政府(朝鮮) 編

『元帥府來去案』(奎17809) 外府(朝鮮) 編

『訓令及照會』(奎27357) 元帥府 檢査局(朝鮮) 編

『駐韓日本公使館記錄』

『러시아국립해군성문서』(국사편찬위원회 編, 2009, vol. 2)

『러시아 國立文書保管所所藏 韓國關聯文書要約集』(朴鐘孝 編, 2002, 한국국제 교류재단)

『러시아문서 번역집』(김중헌 · 박재만 譯, 2011, 선인, vol. 6)

『國譯韓國誌』(한국정신문화연구원 編, 1984, vol. 1)

『프랑스외무부문서』(국사편찬위원회 編, 2010, vol. 9)

『大韓帝國官員履歷書』(국사편찬위원회 編, 1972, 탐구당)

『매천야록』(임형택 외 譯, 2005, 문학과지성사, vol.1 · 2)

『뫼텔주교일기』(천주교명동교회 編, 한국교회사연구소 譯註, 1993, vol. 3)

*Undiplomatic Memories : the Far East 1896-1904*

『皇城新聞』, 『독립신문』, 『데국신문』

『東京日日新聞』, 『東京朝日新聞』, 『鎮西日報』

*The New York Times*

### 2. 단행본

박상섭, 『근대국가와 전쟁 : 근대국가의 군사적 기초, 1500~1900』, 나남출판, 1996.

박찬식, 『1901년 제주민란 연구 : 근대 외래문화와 토착문화의 갈등』, 도서출판 각, 2013.

-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 혜안, 2000.
- 심헌용, 『한말 군 근대화』,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編, 『한국군사사』 9, 경인문화사, 2012.
- 이태진·김재호 외, 『고종황제 역사 청문회』, 푸른역사, 2005.
- 최덕수, 『개항과 조일관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 \_\_\_\_\_, 『대한제국과 국제환경 : 상호인식의 충돌과 접합』, 선인, 2005.
- \_\_\_\_\_, 『조약으로 본 한국 근대사』, 열린책들, 2010.
- 최문형,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한국 침략』, 지식산업사, 2007.
- 한영우 외,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 푸른역사, 2006.
- 현광호, 『대한제국의 대외정책』, 신서원, 2002.
- 山田朗, 『軍備擴張の近代史-日本軍の 膨脹と 崩壊』, 吉川弘文館, 1997.
- 西川長夫·松官秀治 編, 『幕末·明治期の 国民国家形成と 文化変容』, 新編社, 1995.
- 藤原彰 著, 서영식 譯, 『日本軍事史』上, 제이앤씨, 2013.
- Charles Tilly 著, 이향순 譯,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 : 강압·자본과 유럽국가의 발전』, 學問과 思想社, 1994.
- Dietrich Geyer, trans. Bruce Little, *Russian Imperialism—The Interaction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y 1860–1914*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87.
- Malozemoff Andrew 著, 석화정 譯,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책』, 지식산업사, 2002.
- Poggi Gianfranco 著, 박상섭 譯, 『근대국가의 발전』, 민음사, 1994.
- William Reynolds Braisted, *The United States Navy In The Pacific 1897–1909*(Annapolis : Naval Institute Press), 2008.

### 3. 논문

- 강정일, 「지정학적으로 본 러시아제국의 對한반도정책(1884–1904) –팽창원인과 실패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 광무개혁연구반, 「광무개혁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와 현실』 8, 1992.
- 權九熏, 「大韓帝國期日本軍의 侵略과 民族의 抵抗(1897~1910)」, 建國大學校 史學科 博士學位論文, 2000.

- 김기성, 「대한제국기 진위대 증설의 재정적 영향」, 『역사와 현실』 90, 2013.
- 金世慇, 「開港 이후 軍事制度의 改編過程」, 『軍史』 22, 1991.
- 김태산, 「독일 해군연맹(Deutscher Flottenverein)의 성격 변천-1898~1908년 지도부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양사연구』 35, 2006.
- 김혜영, 「갑오개혁 이후 軍司法制度의 개혁 -「陸軍懲罰令」과 「陸軍法律」을 중심으로-」, 『軍史』 89, 2013.
- 도면희, 「황제권 중심 국민국가체제의 수립과 좌절(1895~1904)」, 『역사와 현실』 50, 2010.
- 박정환, 「초기 제주도 개신교 형성사-이기풍 선교사 이전 현지인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역사』 39, 2013
- 朴贊勝, 「活貧黨의 활동과 그 성격」, 『韓國學報』 10, 1984.
- 徐榮姬, 「1894~1904년의 政治體制 變動과 宮內府」, 『韓國史論』 23, 1990.
- 徐珍敎, 「대한제국기 高宗의 황제권 강화책과 警衛院」, 『한국근현대사연구』 9, 1998.
- \_\_\_\_\_, 「대한제국기 정치지배세력과 정국운영-군비강화책의 추진과 권력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26, 2003.
- 양상현, 「대한제국의 군제 개편과 군사 예산 운영」, 『역사와 경계』 61, 2006.
- 이운상, 「1894~1910년 재정제도와 운영의 변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 \_\_\_\_\_, 「대한제국기 황실 주도의 재정운영」, 『역사와 현실』 26, 1997.
- 이은자, 「로컬의 관점에서 본 清末의 義和團運動」, 『사림』 51, 2015.
- 張嘯叔, 「고종의 軍統帥權 강화시도와 무산과정 연구-대한제국의 멸망 원인과 관련하여-」, 『軍史』 66, 2008.
- 鄭夏明, 「韓末 元帥府 小考」, 『육사논문집』 13, 1975.
- 조재근, 「대한제국기 군사정책과 군사기구의 운영」, 『역사와 현실』 19, 1996.
- 車瓊愛, 「韓國人の 義和團運動 認識 및 이를 통해서 본 世界認識」, 『東洋史學研究』 84, 2003.
- \_\_\_\_\_, 「의화단진압전쟁이 한국의 사회·경제에 미친 영향」, 『中國近現代史研究』 23, 2004.
- \_\_\_\_\_, 「의화단진압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대응」, 『明清史

研究』24, 2005.

車文燮, 「舊韓末 軍事制度의 變遷」, 『軍史』5, 1982.

車俊會, 「韓末 軍制改編에 대하여 : 軍隊解體에 이르는 過程」, 『歷史學報』22, 1964.

James L. Hevia, “Leaving a Brand on China : Missionary Discourse in the Wake of the Boxer Movement”, *Modern China* Vol.18, 1992.

<Abstract>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Policy and Military Operations The Marshal Headquarters in The Great Han Empire Prior to the Russo-Japanese War

Moon, Jun-ho

Since its establishment, The Marshal Headquarters that directed the military affairs had to respond to the realized foreign threats. Because both Russia and Japan that wanted to occupy the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continued arms race. Meanwhile, the turmoil in the border areas became frequent in accordance with the spread of the Boxer Rebellion(義和團事件), and as the eight countries allied forces became visualized, The Great Han Empire regularized 'the military superiority police' through the revision of 「Marshal Headquarters' system」 and the expansion of armaments. The Great Han Empire hereby became to set government centering on the military operations institutionally.

Due to the outbreak of war to suppress the boxers, the large-scale invasion of the Qing bandit(清匪) and the overall problems followed by the influx of refugees. On this, Marshal Headquarters reinforced the military guard troops extensively in the border areas and realized 'the linear defense' which was arranged circumspectly by troops. Through this, the Qing bandit, that is a mediatory factor, was able to be repelled and the intervention of foreign forces blocked.

Meanwhile, internal turmoil had to be suppressed and the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had to be shown abroad since Russia and Japan were navigating the intervention cause in various ways.

Therefore, local appeasement was made in the form of the stationed troops on the key points and putting the military troops on the area where the situation took place. In this regard, the foreign protection, which could be extended to foreign affairs, was an important issue. In addition to this, Marshal Headquarters tried to achieve stability in the region where the troop was dispatched through the military inspection and made an effort to establish fundamental principles and improve morale of the military such as the realization of institutional care for the fallen soldiers.

Key words : The Great Han Empire, The Marshal Headquarters, Military system, Military policy, Military operation, Expansion of armaments, The Boxer Rebellion, The border defence, Internal security

